

社說

총체적 인식으로 혁명의 교훈 되살리자 4·19 32돌을 맞이하며

올해로 4·19혁명은 서른두돌을 맞았다. 이승만 정권의 독재정치가 전국민이 한겨울, 그래서 민권을 되찾은 우리민족 역사상 최초의 경험이기도 하다. 자유민주주의 혁명으로서 우리민족의 생명력이 죽지않았음을 과시했으며 민족들의 힘을 보여주었다. 그리고 이땅의 청년학생들은 독재의 암살에 산화하면서 정의감에 넘쳐 혁명의 주도적 역할을 해왔던 것이다.

이러한 4월혁명을 두고 해마다 4월이면 대한민국의 4·19세대들은 그 뜻을 기리며 다시금 그날을 되새기며 정의의 두 주먹을 불끈 쥐곤 한다.

그러나 해가 갈수록 4·19의 그 교훈과 의미들이 퇴색해 가고 있는 듯하다. 4·19혁명 기념집회는 어느샌가 당위성과 추상성에 얽매어 있는 느낌을 준다. 세대의 변화를 겪으면서 4·19는 혁명, 민주주의라는 도식적 공식으로 떠올리는 것에 그치고나 있는 양이다. 으레 4월이면 4·19, 4월19일은 4월혁명기념일' 정도로 그 의미는 단순화되어 있고 오히려 4월혁명의 의미에는 소홀해져가는 느낌이다.

'역사는 과거와 현재의 끊임없는 대화'라 했다. 아무리 시간적 단절이 있을지라도 과거는 현재의 존재 기반임을 다시한번 주지해야 한다. 4·19에 즈음해 기념비에 꽃환송이 변화하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된다.

4월혁명을 다시 상기하면서 그 교훈과 의미

를 되새기는 작업과 함께 오늘에 계승을 염두해야 한다.

4월혁명은 역사의 흐름을 거역하는 정권에 대해 철퇴를 가할 수 있는 이들이 바로 민중이라는 것과 그 과정에 있어 민중의 자각과 실천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계기가 되었다. 한편으로 비민주적 반민주적 민족성에 대응한 4월혁명은 이후 보수 반동세력의 권력집권으로 혁명과정상의 문제가 지적되는 계기를 마련하기도 했다. 즉 4월혁명을 주도했던 학생들은 독재정권이 무너지자 곧 학문의 길로 돌아서 버렸으며 혁명에 이르러 사회경제적구조의 안목결여로 노동자 농민규합 부재, 역사인식의 선결한 고려부족으로 혁명이후의 에너지를 고갈시켜지 못하고 말았다. 이른바 '미완의 혁명'이라 지칭되는 까닭도 여기있을 터이다.

이젠, 역사라는 거대한 수레바퀴를 좀더 자신있게 굴러야 한다. 왜냐하면 90년대의 우리는 60년대의 교훈이 있음에 그것을 '변증법적'으로 발전시켜야 하는 의무가 역사는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진정한 인간해방을 이룩하기 위한 계속적인 노력들이 역사에서 반복될 전제라면 4월혁명이 남긴 오류를 극복해 현재의 사회·경제적 구조와 시대적의 총체적 인지가 우선 필요하다 할 것이다.

즉 미완의 혁명에서 보다 성숙한 혁명을 준비해야 하는 것이다.

진실은 은폐·매도 되어서는 안된다

군부재자투표 부정을 보며

지난 14대 총선에서의 군 부재자투표 부정 문제가 국민적 의혹과 분노가 높아지는 상태서 국방부는 14일 군 부재자투표 부정관련 제보에 대한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발표문은 "군부재자투표 부정은 있을 수도 없지만 확인결과 사실무근"이라고 결론을 내렸다.

예상된 말들이라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국방부는 전체적인 조사와 성실한 답변을 외면한 채, 너무도 편의적으로 일을 끝내려는 인상이 짙다.

이처럼 중위의 군 부재자투표 부정폭로에 이어 이원섭 일병의 양심적이고 용기있는 제보와 잇따른 '정정투표'가 밝혀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는 국방부의 '임시방편적인' 답이 끝나는 '군'의 '정정'한 면모와 자존심을 크게 헤치고 있음을 간파할 수 있다.

국민의 군대가 한 정권의 정권유지차원으로 이용 전락되어서는 아니되겠다는 것이 민의이다.

이러한 민의를 지키려는 양심과 정의의 사람에게 '군'의 명예'를 실추시켰다고 매도해 버리는 국방부와 '보사상대'에 빠졌다고 스스로 공언하는 여당의 작태는 진정 '국민의 명예'를 지켜주는 것인지 아니면 퇴색시키고 있는 것인지 반문해 볼 문제이다.

이번 사건에 대해 은폐, 축소하면서 여론을 무시시키고 또 대국민적 비난을 면키위해 국방부의 뒤늦은 체면건지기의 일부 사실의 시인은 또 하나의 국민배신행위인 것이다.

한글현대사에서 군의 모습을 살펴볼 때 다수의 군인들이 군은 더욱 거대한 군으로 자리잡기위해 혼신의 노력을 바쳐왔다. 이같은

역사적 당위를 외면한 채 사실의 규명없이 이 지른 중위의 기소유예와 이원섭 일병의 구속 행위라는 일방적 처사는 결코 용서받지 못할 또 하나의 군의 오류사로 남을지도 모른다.

여론의 정치를 펼쳐나가자면 6공정권도 여론의 빗발치는 상태에서 왜 지금,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는가. 무책임하고 불성실한 현정권의 모습을 다시금 보여주고 있다.

13대 국회가 이제 한달여 남짓 남았다. 여소야대의 좋은 출발로 각종 청문회 등으로 5공정권의 비리들을 파헤치는 등의 성과를 보였으나 권력유예에만 집착한 3인의 야합으로 하루 아침에 파행적 정치 구도를 거듭하여 왔을 것이다. 그러나 이제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하선 계속적인 상임위 유효를 청산하고 이를 벌여 국회의 본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다.

우리사회의 '어둠'은 또다시 양심에 따라 정의로운 행동을 하게 한 젊은이들을 '햇소리'라는 불신의 기운으로 흐리게 하고 있지는 않은지.

진실은 매도되고 거짓이 사실로 굳혀지는 사회가 현정권하에 우리가 잃어버린 빼앗긴 양심의 사회가 아닐까 한다.

우리의 기본권마저 오도하고 착취하고 있는 현정권은 하루빨리 군의 정치적 중립화와 민의 의사를 존경하고 수렴하는 정치를 촉구하는 바이다.

14대 총선에서 벌어진 투표부정의 의혹은 철저한 진상이 있어야겠으며 이번 총선으로 국민을 군대를 정권유지 수단으로 이용한 현정권은 진정한 '국민의 명예'를 실추시키는데 대하여 대국민적 사과도 또한 분명하여야 할 것이다.

상해대한민국임시정부가 수립된지 73주년이 되는 13일 안두희씨가 43년의 침묵을 깨고 백범 김구선생 암살에 대해 입을 열었다는 보도가 쏟아졌다.

동아, 중앙, 한국등 13일자 일간지 1면과 사회면, 사실등을 통해 안두희(75)씨가 '배후'에 대해 입을 열었다고 밝히고, 김창룡과 안두희 개인 신상과 백범 암살 전후를 인터뷰를 인용 보도했다.

13일의 보도에서 대부분의 일간지는 안두희씨의 자백과 권총희생(백범시해전상규명위원회위원장·56)의 8년간의 끈질긴 추구에 집중했다.

다음날인 14일에는 안씨의 증언내용보다는 김창룡 사후의 각종특례를 예로들며 그의 '비호세력'에 초점을 맞추기 시작했다. 14일 경향신문은 사실을 통해 '백범 암살사건의 진상이 안씨의 자백만으로 마무리되어서는 안된다'며 '관련기관을 망라한 정부차원의 특별조사기구같은 것을 구성해서라도 의혹에 싸였던 백범암살사건을 더 밝혀내야한다'고 주장, '역사의

진실을 밝히자'고 보도했다.

또한 4대 일간지에서도 백범의 아들 김신씨와의 회견을 인용, "안씨 증언은 빙산의 일각이며 당시 지휘계통을 밝히는 것이 관건이다"라고 보도.

이번 안씨의 증언에 대한 보도는 계속해서 친일세력에 대한

추적을 지리 잡았다고 보도하고 있다.

여기에서 김창룡이라는 인물에 대한 언론 보도를 요약해 보면 권력의 방황에 관한 감각을 지닌 파다충성에서 안씨를 사주했다고 보는 견해와 당시 이대통령이 직접 관련되었다는 시각 등 당시의 관련자와 측근의 말

이러한 면은 특히 범행을 후회하는가하는 질문에서 잘 나타난다. 그는 진술후 인터뷰에서 "후회해본 적도 있지만 김구를 위해서도 나라를 위해서도 국론통일을 위해서도 잘한 일이었다"고 밝혔다. 이것은 43년만에 침묵을 깨고, 배후에 대해 밝히고, 2월 28일 김구선생의 묘소를 참배하며 진정 참회의 눈물 흘린것과 거리가 먼 것이다.

이것은 안씨의 마음의 문이 다 열리지 않았음을 뜻한다. 바로 나라를 위한다는 그리고 통일된 나라를 위한다는 사람들의 잘못된 '빨갱이'증후군이 그를 죄인으로 만들었다.

그들은 애국자를 빨갱이를 키우는 커다란 나무로 보았고 그 나무는 쓰러졌다.

역사는 이제 암살범의 증언을 지나 배후를 찾아낼 것이다. 그리고 대중속에 잘못 뿌리박힌 사상의 균열을 찾아 다시 출발할 것이다.

(이치환 기자)



백범 암살보도 배후추적 언론의 역할

그 당시의 시대적 상황과 입지를 밝히는 것으로 진행되어갔다.

암살 당시의 시대적 상황에 대해서는 좌·우 이데올로기 갈등이 심화된 정치관으로 또한 친일파의 정치세력이 그간 부재했던 국내 정치세력을 누르고 정치의

을 인용, 지면화 했다.

여기에서 주지할 사실은 안씨의 인터뷰 내용이 신문마다 너무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아마 자신의 입장을 정리하지 못한 안씨의 우왕좌왕하는 심리변화에서 기인한 것이다.

사회구조적 억압이 유도한 성폭력

— 성폭력의 본질과 그 해결을 위한 모색



저한 압제가 아니었으면 불가능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압제의 창출구조를 살펴보면 비단 성폭력이 여성의 문제만이 아닌 대다수의 남성들도 그 피해자이며, 희생물인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불평등한 사회구조속에서 정치·경제적 소외로 강한 반감을 느끼는 남성들에게 여성은 화풀이를 할 수 있는 또다른 공격·지배대상으로 제공되어 왔다.

살펴보면 크게 가정내 폭력, 가정의 성폭력, 아동에 대한 성폭력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가정내의 성폭력은 아내와 아동에 대한 폭행, 가혹행위, 근친상간 등으로 볼 수 있는 데, 특히 아내구타는 심할 경우 목숨까지 잃게 되고 아내장간을 동행하게 마련이다. 의외로 근친상간이 많으며 이러한 가정내의 폭력은 자라들에게 성폭행의 학습장이 된다.

가정내 성폭력의 경우, 현행법

한 요인임으로 시정되어야 할 부분이다.

또한 재판과정에서는 남성중심의 사고로 인해 가해자에게 정상참작이 유도되고 오히려 피해여성에게 조사의 초점이 맞춰져 강간의 고통을 가중시키고, 결국에는 까다로운 범죄혐의로 인해 고소시 기소율이 40%를 밑도는 것이 현실상황이다. 요즈음 성폭력의 피해자 뿐 아니라 가해자의 연령도 낮아지는 추세인데, 피해

불평등속에 성적 대상화·상품화 시켜 제도적 장치 마련과 인식 전환이 해결책

중 가부장제 이데올로기를 확산 시킴으로써 구조적으로 대부분의 사회활동을 맡고 있는 남성들의 불만을 무마시키고 그들의 관심을 정치외적인 것으로 돌려 지배세력을 공고히 해온 것이다. 국민 우민화 정책의 하나인 3S(Sex, Sports, Screen)정책이 대표적인 예일 것이다. 또한 여성에게는 사회·경제적으로 독립할 수 있는 길을 제한하고 성의 대상화, 상품화를 통해 인간이 아닌, 남성에게 지배당하는 또 하나의 부류로 전락시켜 버린 것이다.

현재 자본주의사회에서 독점자본이 생산부문의 향락산업에 대량투자를 함으로써 성행위의 욕구를 증대시키고, 매춘과 매매춘을 부추겨 향락·퇴폐산업이 발전하자 이에 따른 물량공급(?)을 위해 인신매매가 성행했던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처럼 성폭력 범죄는 단순히 한 여성과 남성의 문제가 아닌 사회전반적인 정치·경제의 측면에서 해결되어야 하고 그 속에서 해결되어야 한다.

현재의 성폭력범죄의 유형을

에서는 아내구타가 이혼의 사유가 될 수 있지만 실제적으로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자녀양육문제, 사회적 편견 등으로 쉽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또한 구타남편은 현행법상 형사입건될 수 있지만, 친고죄 성격이 강하고 대부분의 아내들이 지속적인 구타로 인해 심한 육체적 상처와 정서불안에 시달리므로 구타남편을 고소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그야말로 '주먹은 가만히 법은 먼 것'이 가정내의 폭력인 것이다.

가정의 성폭력의 경우 강간, 성추행,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강간, 성적 강요행위, 혼인방자간을 행위 등이 있는 데, 강간처사를 제의하고는 모두 친고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법적 한계가 두드러진다. 강간은 알려지지 않은 강간이 98%나 되고 신고율은 2%내외로 저조한데, 이는 피해 여성의 심리적 충격이 큰 데 비해 고소제기 기간이 6개월로 한정되어 있어 있음에 기인한다. 법률에 제시된 강간의 형량이나 벌금 등이 너무 적은 것도 범죄증가의



(이금주 기자)

국회정책 연구위원 및 중앙당 정책실 요원모집

진취적인 정책개발과 활력있는 의정활동에 참여하여
정책정당, 수권정당으로서의 소임을 함께 할 인재를 널리 모집합니다.

1. 모집부문·인원 및 자격요건

모	집	부	문	인원	자	격	요	건
국회정책 연구위원	●법사 ●행정, 내무 ●농림, 수산 ●보사, 환경, 노동	●외무, 통일, 국방 ●재무, 경제, 상공 ●동자, 건설		○○명	1) 정당의 정책부서, 언론기관, 연구기관 유경험자			
중 앙 당 정책전문위원	●교통, 체신 ●교육, 체육, 청소년, 문공 ●과학, 기술				2) 행정부 해당부처 유경험자			
					3) 해당분야 학위소지자 등 전문성을 인정할 수 있는자			

2. 전형방법

●서류심사 및 면접

3. 제출서류

- 가. 자필이력서 1통
- 나. 자기소개서(기간별 경력사항, 부문, 직위, 입당후 계획을 16절지 3매 이내 기술) 1통
- 다. 최종학교 전학년 성적증명서(석사이상 학부성적 포함) 1통
- 라. 학위증사본(석사이상) 1통
- 마. 재직증명서(유관기관 재직 경력자) 1통

4. 서류접수

- 가. 접수기간: '92. 4. 16(목) ~ 4. 22(수)
- 나. 접 수 처: 서울특별시 종로구 평동149-1(서진빌딩) 통일국민당 정책위원회
- 다. 접수방법: 우편접수(마감일 도착분까지 유효)
- 라. 문의전화: TEL. 720-7111, 723-8111 (交 357, 358)

